

민주당 전준위 '화기애애'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에서 오제세 위원장과 의원들이 이야기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병두 부위원 장, 오제세 위원장, 김민기, 김영진 의원

민주 내달말 당대표 후보 3명 압축

최고위원 후보는 8명으로…순회 경선 없이 원샷 방식 전준위, 권역별 최고위원제 폐지…29일 최종안 의결

더불어민주당이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8월 25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다음 달 말께 중앙위원회를 열어 당대표 후보자를 3명 으로 압축하는 예비경선(컷오프)을 하기 로 가닥을 잡았다. 또 대의원 45%, 권리당 원 40%, 일반 국민 15% 등의 투표 결과를 반영해서 대표를 선출하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민주당은 26일 국회에서 전국대의원대 회 준비위원회(전준위) 1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포함한 지도체제 개편, 전 당대회 일정 및 경선 방법 등을 논의했다 고 전준위 간사인 김영진 의원 등이 전했

민주당은 우선 대표 1명과 최고위원 5명 을 분리해서 선출하되, 본선 전에 예비경 선을 통해서 대표 후보는 3명, 최고위원 후 보는 8명으로 각각 줄일 예정이다. 또 민주 당은 대표·최고위원 선출 시 지역별로 돌 아가면서 투표를 진행하는 순회 경선 대신 전대 당일인 8월25일 한 번에 경선을 실시 하는 '원샷'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일단 전대 준비위는 현재 시도당 위원장 이 돌아가면서 맡는 권역별 최고위원제도 는 폐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김영진 의 원이 회의 후 기자들에게 전했다.

컷오프는 주요 당직자와 지역위원장, 민 주당 소속 광역·기초단체장 등 500명 정도 로 구성되는 중앙위원회에서 이뤄진다. 잠 정적으로 7월말에 컷오프를 실시하기로 했지만 일정은 다소 유동적이다. 지역위원 회 개편대회가 종료된 이후에나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조직강화특별위원회와의 일정을 조율한 후 최종적인 일정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전준위는 또 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 는 본선에서는 대의원 현장투표 45%, 권 리당원 ARS 투표 40%, 일반 여론조사 (국민+일반당원) 15%의 규칙을 적용하 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

현 민주당 당헌・당규는 대의원・권리당원 투표 85%, 국민·일반당원 투표 15%를 각 각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비율을 엇비슷하게 조정하겠 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 2016년 전당대회 와 비교할 때 권리당원 투표 비율은 늘리 고 일반 여론조사 비율은 낮추는 것이다. 앞서 2016년 전당대회에서는 대의원 투표 45%, 권리당원 투표 30%, 일반 여론조사 25%를 각각 반영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16년 전당대회 때 대 의원·권리당원 비율이 75%였고 국민·일반 당원은 25%였는데 정치발전위원회의 혁 신안에선 권리당원 비율을 10% 높이고 국

민·일반당원 비율은 15%로 줄였다"며 "그 런 정신과 취지를 충분히 반영, 비율을 조 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민주당 대의원은 1만3000명 규모이며 당비를 납부하는 권리당원은 대략 70만명 이다. 대의원 투표는 조직이 강한 후보가, 권리당원 투표는 인지도가 높은 후보가 각 각 유리할 것이라는 게 일반적 분석이다.

오제세 전준위원장은 비공개 회의에 앞 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전당대회는 친 문(문재인)과 비문, 계파라는 말이 나오지 않고 비전과 정책을 통해 당원 중심・국민 지지를 받는 훌륭한 전당대회가 돼야 한다 고 생각한다"며 "전당대회 관련 당헌・당규 제반사항이 공정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 라고 말했다.

전준위는 분과위 회의 후 오는 29일 제2 차 회의를 열어 대표·최고위원 선출방안, 최고위 구성 방안, 컷오프 진행 방안 등을 의결할 예정이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당, 253개 지역위원장 공모 여야 오늘부터 원구성 협상

민주당이 27일부터 전국 253곳 지역위 원회에 대해 후보 공모를 시작, 내달 중순 까지 지역위원장 선임 절차를 마무리할 계 획이어서 지역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 고 있다. 지역위원장에 선출되면 21대 총 선 공천에 있어 유리한 고지에 오를 수 있 기 때문이다. 일단 민주당은 현역 국회의 원은 모두 당연직 지역위원장에 선임한다 는 입장이며, 대행 체제 및 일부 문제가 있 는 지역구는 조직강화특별위원회의 심사 를 거쳐 단수 추천 및 경선 여부를 결정할 다.

우선 광주에서는 광산 을, 동남 갑 지역 위원장 교체가 유력하다. 동남 을은 이병 훈 전 위원장의 행보가 변수다.

전남은 현역 국회의원이 있는 담양·장성 ·영광·함평과 무안·신안·영암을 제외하고 전 지역에서 치열한 경쟁전이 예고되고 있 다. 당장 지역위원장이 실질적 공석 상태 인 광양·구례·곡성과 해남·진도·완도를 놓 고 벌써부터 치열한 경쟁전이 펼쳐지고 있 /임동욱 기자 tuim@

위해 27일 원 구성 협상에 돌입한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 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평화와 정의의 의 원 모임 장병완 원내대표는 27일 오후 국 회에서 원 구성 협상을 위한 원내대표 회 동을 하기로 했다.

20대 국회 전반기는 지난 5월 30일 끝났 으나 여야 간 원 구성 협상이 이뤄지지 못 해 국회는 '개점휴업' 상태가 계속되고 있 다. 6.13 지방선거 등의 영향으로 원 구성

여야가 국회 장기 공백 상태를 해결하기 협상이 뒷전으로 밀렸고, 지방선거 참패 후폭풍에 야당이 혼란을 겪으면서 여야는 협상 착수 시점을 잡지 못했다.

> 하지만, 바른미래당이 새 원내대표를 선 출한 것을 계기로 국회가 원 구성 협상에

여야가 일단 원 구성 협상에 들어가기로 했으나 국회의장단・상임위원장 선출, 상임 위 배분 등을 놓고 셈법이 제각각이라 협 상 타결에 이르기까지 진통이 불가피할 것 으로 예상된다. /박지경 기자 jkpark@

'당권 도전' 송영길 호남서 광폭행보

순천대서 토크콘서트…내달 1일 광주서 포럼출범 결의대회

오는 8월 25일로 예정된 더불어민주 당 전당대회에서 당권에 도전하는 4선 의 송영길 의원(인천 계양구을)이 당의 텃밭인 광주·전남지역에서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다.

송 의원은 26일 오후 2시 순천대학교 70주년기념관에서 열린 '남도포럼 창립 식 및 출범기념 토크콘서트'에 참석했 다. 남도포럼은 전라도 정도 천년을 맞 아 남도의 미래 비전을 공유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이념과 철학을 바탕으로 남도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출범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개호 국회의원과 서 삼석 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 당선인,



전남도 내 22개 시 ·군 포럼 대표단을 비롯한 상임대표 단, 공동대표단 등 2000여명이 참석 했다고 송 의원측 은 전했다.

송 의원은 또 오

는 7월1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포럼 '광주의 길' 출범을 앞둔 결의대회 에 참석한다. 송 의원 지지모임 성격인 이 포럼에서는 '평화를 노래하다'란 주 제로 토크 콘서트를 갖는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한국당 비대위 역할 놓고 또 시끌

복당파 "혁신위에 전권을"…친박계 "다리 역할만"

자유한국당이 26일 김성태 대표권한 대행 겸 원내대표의 유임으로 가닥을 잡 아가고 있지만, 앞으로 출범시킬 혁신 비상대책위원회의 역할이 새로운 쟁점 으로 부상하고 있다.

김 대행과 바른정당 출신 복당파 의원 들은 비대위가 인적청산을 등 혁신전권 을 행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친박 (친박근혜)계 의원 등 당내 상당수 의원 들은 전당대회로 가기 위한 '다리 역할' 을 그쳐야 한다고 맞서고 있어서다.

김 대행은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구성 준비위 회의에서 "혁신 비상대책위원장 에게 한국당을 살려낼 칼을 드리고, 내 목부터 치라고 하겠다"며 "그 칼은 2020

년도 총선 공천권에도 영향을 줄 수 있 는 그런 칼"이라고 밝혔다. 비대위에 혁 신 직업의 요체라고 할 수 있는 '인적청 신'의 전권을 주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다.

그러나 차기 전당대회를 준비하고 있 는 당내 일부 중진 의원들과 친박계 의 원들의 입장은 다르다. 이들은 조속한 시일 내에 조기 전대를 열어 새로운 리 더십을 선출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처 럼 비대위의 역할을 놓고 당내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리다 보니 당분간 비대위 구성은 힘들어지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적지 않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바른미래 지방선거 패인 '갑론을박'

평가 토론회…안철수·유승민 책임론 제기

바른미래당의 6·13 지방선거 패배와 관련, 당의 양대 간판인 안철수 전 의원 과 유승민 전 공동대표의 책임론이 집중 적으로 제기됐다. 또한 자유한국당과의 차별화 실패, 서울시장 선거에서의 '안 철수·김문수 단일화' 논의, 공천 과정에 서의 당내 갈등 등이 결국 바른미래당의 지방선거 참패로 이어졌다는 자성의 목 소리도 쏟아졌다.

이 같은 지적은 김관영 원내대표와 하 태경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바른미래당 6·13 지방선거 평가와 과제 토론회'에서 나왔다.

참석자들은 안철수 전 의원에게 '성찰 의 시간'을, 유승민 전 공동대표에게는 '자기희생'을 각각 주문했다. 다만, '안 철수 정계 은퇴론'에 대해서는 부정적 견해가 주를 이뤘다.

전 국민의당 제2창당위원장인 김태일 영남대 교수는 발제를 통해 안 전 의원 에 대해 "충전이 필요하다"며 "거듭된 정 치적 실험 과정에서 자신의 사회적 자본 을 소진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안 철수 정계 은퇴론'에 대해 "안 전 의원에 대한 가혹한 청산주의적 표현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성권 전 부산시장 후보는 "젊은 정당 을 만들기 위해 유 전 공동대표가 솔선수 범해야 한다"며 유전 공동대표를 중심으 로 한 3선 이상 의원들의 2020년 총선 불출마 선언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